

생색은 호남에, 보따리는 영남에

■ 정부 권역별 30대 선도사업 예산 반영 실태

호남, 계속사업·새만금 빼면 1조원 불과

동남권에 동북아 공항... 무안공항 악영향

국토해양부가 18일 국회에 제출한 '권역별 30대 선도 프로젝트 예산 반영 현황' 자료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호남권의 사업 예산이 37조2천600억원으로 7대 광역경제권 가운데 가장 많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신규 사업 예산은 전체의 30%인 12조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당장 지역 정·관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예산 계획에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권역별 30대 선도 프로젝트 예산 반영안'을 조망해 본다.

◇호남권 선도사업 예산=정부는 호남권 선도 사업에 37조원이 투입, 광역경제권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이 반영된다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지적됐듯이 호남권 선도 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계속사업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전체 37조원대의 예산 가운데 호남고속철도 건설, 여수 엑스포 지원,

새만금 개발 사업 등에 24조3천500억원이 투입되고 12조8천억원만이 광주 외곽순환도로 건설, 서남해안 연륙교 건설, 새만금 신항 건설 등에 투입된다. 당장 정부가 호남권 선도 사업을 선정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보다는 덩치가 큰 계속 사업을 택해 예산의 규모만 키운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내년 호남권 선도사업 가운데 신규 사업 예산은 새만금 신항 50억원, 서남해안 연륙교 건설 350억원, 광주 외곽순환도로 건설 44억원 등 444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영남권 선도사업=영남지역 광역 경제권은 대경권(대구·경북)과 동남권(부산·경남)으로 나뉘어져 있다. 대경권(12조600억원)과 동남권(9조9천900억원)의 선도 사업 예산 총액은 총 22조5천억원 호남권 선도 사업 예산에 비해 무려 15조원에 가깝다.

그러나 영남권 선도 사업이 훨씬 실속 있다는 평가다. 선도 프로젝트 대부분이 신규 성격이 강하거나 신규 사업이기 때문이다. 즉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 추가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대경권 및 동남권의 선도 사업 가운데 과거 정권에서 투입한 예산 6조751억원에 비해 수 없을 정도다. 호남권의 선도 사업 가운데 과거 정권에서 투입한 예산은 "영남 정권이라는 점에서 신규 사업이 대경권과 동남권에 많이 포함된 것 같다"며 "그러나 광역경제권 선도 사업과 관련, 호남 정치권과 광역단체장들이 얼마나 많이 뛰었느냐도 짚어볼 문제"라는 비판적 입장을 나타냈다. ◇광양항·무안국제공항=정부가 10조원을 투입, 새만금 신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함에 따라 광양항의 미래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향후 광양항이 부산항과 새만금 신항에 사이에 끼이면서 사실상 동북아 물류 허브 함안으로서의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동남권에 2조원을 투입, 동북아 제2허브 공항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무안국제공항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안국제공항 건설 비용의 총 사업비가 3천59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동남권에 들어설 동북아 제2허브 공항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장은 무안국제공항에 별다른 영향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물류 분야 등이 동남권 국제공항에 잠식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주승용(민주당·가운데) 의원 등이 2009년도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예산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시·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콜센터 건립 차질 대책은 없나

전남 농산물 수출단지 '이름뿐'

광주시의회는 18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도시공사,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했다. 전남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이날 F1대회의 허술한 교통·숙박대책을 비롯 복지여성국과 농림식품국, 감사관실과 공보관실의 현안을 집중 추궁하고 전남개발공사 건설공사 현 지점검을 벌였다.

광주시의회

◇콜센터 건립 차질 대책=유재신(민주·광산 2)의원은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광주시가 추진중인 콜센터 전용건물이 시공사 모기업의 부도도 건립 차질이 불가피한데 대책은 있느냐"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광주시가 289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사를 추진하는 시공사의 건전성 여부 및 재무 변동 상황 등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조호권(민주·북구 4)의원은 "전용 건물을 지어 일지리를 창출,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된 것 아니냐"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우근(민주·북구 3) 의원은 "도시 공사가 지난해 추진한 사업의 불용액이 416억원에 이른다"면서 "쓰지도 않을 거라던 뒤러려 예산을 이렇게 받아냈느냐"고 꼬집었다.

◇아시아공연예술제 내실 갖춰야=이명자(민주·비례)의원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나서 "2008 아시아공연예술제"가 오는 12월30일부터 열리는데 추진위원회가 최근에 야구성되는 등 졸속 추진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김선문(민주·남구 1)의원은 소방 안전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전국 16개 시·도의 소방서장 116명 가운데 하위직부터 묵묵히 일해온 비간부 출신 소방서장이 없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면서 사기를 감안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상수도요금 인상 근거대라=나종천(민주·남구 2)의원은 상수도사업 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광주시의 내년 도 상반기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 "상수도요금 인상보다 누수율을 줄이기 위한 노후관 교체, 배수관 정비 등이 먼저"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광주시의 경우 t당 수돗

물 생산원가만 보더라도 602.6원으로 서울(554.2원), 대구(561.7원), 대전(488원) 등에 비해 훨씬 높고, t당 상수도요금도 서울(517.5원), 대구(446.4원), 대전(484.8원)에 비해 높은 상황인 반면 누수율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18.3%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의회

◇F1대회 교통·숙박 대책 논란=김석원(민주·해남 1) 의원은 F1대회준비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F1대회 오는 2010년에 개최되는데, 교통 및 숙박대책 영역이 내년 3월까지야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교통·숙박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며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전남도는 총사업비 9천400만 원을 투입, 전남도립대학 산학협력단에 'F1 교통·숙박대책 영역'을 의뢰했으며, 이 용역결과에 따라 경주장 인근 광역교통개선대책, 기존 숙박시설 활용방안 및 신규 숙박시설 확보방안 등 효율적인 교통·숙박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의원은 또 최근 문광부가 국회 국제경기특위에서 내놓은 F1대회에 대한 KDI의 타당성 용역 내용을 언급하며 "중앙부처가 F1대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데 대해 전남도의 대책이 소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수출단지 농산물 90% 국내 판매=황병순(민주·보성 1)의원은 "전남 지역 시설원에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90%가량이 국내 시장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수출전문단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수출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농가의 잦은 계약위반으로 수출선용도가 하락하고, 겸업농으로 생산을 소홀히 해 품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홍형기·김지희기자 redplane@

■ 내년 예산안 편성 문제점

정부가 지난 7일 수정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간 차별, 사업계획 없는 예산 편성, 집행 실적 부진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2009년 예산안'에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육성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편성됐을 뿐 아니라 전남지역 예산 증액 규모는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예산 지역간 차별=정부의 예산수정안에 따르면 내년도 전남지역 국

전남 증액 규모 평균 밑돌아 지역 차별 계획에도 없는 광역경제권 사업 포함도

비 예산 지원 규모는 5조6천900억원으로 올 5조2천300억원보다 8.8%(4천600억원) 늘었다. 반면 전체 예산(기금 제외) 규모는 195조1천억원에서 217조6천억원으로 11.5% 증가, 전남 국비 예산 증가율보다 2.8%포인트 높았다. 더욱이 전남에 대한 사회간접시설(SOC) 예산 지원은 1조9천100억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20.4% 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19조5천

억원에서 24조8천억원으로 26.7%나 증가, 전남지역 국비 지원 증가 규모보다 6.3%포인트 높았다. 이 같은 지역간 불균형한 예산 지원은 그동안 누적된 지방간 경제력 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업계획 없는 예산 편성=광역경제권선도육성사업을 위해 지식경제부가 올린 2천17억의 예산은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예결특위의 최종 심의를 남겨놓게 됐다. 하지만, 이날 지경위에서 민주당 김재균·우재창 의원은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반대'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안이 편성됐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남고속철·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 예산 집행실적 늘릴 대책 필요=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예산 집행 실적은 23.1%에 불과했다. 예산정책처는 때문에 1천400억원이 반영된 내년도 수정예산은 연내 집행이 불투명하다는 의견까지 달았다. 예산정책처는 또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경우도 "행정 절차 및 타당성 재검증 때문에 예산집행이 저조하다"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므로 사업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철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술, 안전을 이어주는 기술

그 중심에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가스 안전을 위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스 안전을 위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스 안전을 위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스 안전을 위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스 안전을 위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스 안전을 위한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
Korea Gas Technology Corporation